

기사



보도와 평론



-공정성과 형평성 잃은 보도

▲ 2010 - 1158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0년 7월 20일자 A5면 「7·28 재보궐선거 D-8/강원 원주/“거센 야당바람 잠재운다”/“네번째 도전 반드시 성공”」 제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원도 원주에는 6·2 지방선거 당시 ‘야당 바람’이 크게 불었다. 이계진 한나라당 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까지 민주당 몫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열기를 7월 28일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47세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를 내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여야 후보 모두 접전으로 예상한다.

이인섭 한나라당 후보는 19일 새벽 5시 30분부터 무실동에 위치한 배부른 산을 올라 아침 운동을 하는 시민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사람이 누웠을 때 배가 부른 모습을 띠는 이 산의 형상처럼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기 정착과 명품도시 원주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일꾼론’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최연소 원주시의원(31세)과 5~7대 강원도의원 등 16년간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오로지 정책 대결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명륜동에 위치한 모범운전자회와 KT 원주 지부

를 잇달아 방문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호 씨(37)는 “정부와 여당의 인기가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원주를 잘 아는 사람을 뽑겠다”며 이 후보에게 한 표를 다짐했다.

박우순 민주당 후보는 강렬한 햇빛 탓에 화장을 한 듯 진한 선크림을 바른 채 뻑뻑한 일정을 소화했다. 박 후보는 오전 6시 30분부터 새벽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펼친 후 단계동 4거리로 옮겨 ‘1인 피켓’ 유세를 선보였다. 북적대는 자원봉사자들과 유세차량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박 후보가 홀로 ‘기호 2번 박우순’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출근길 인사에 나선 것. 이날 발표한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가량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박 후보는 이번이 네 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이계진 전 의원에게 30%포인트 차이로 참패했다. 박 후보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며 사수는 합격이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붙은 제가 이번에는 인간 승리의 표본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게는 최근 직무정지 사태를 빚은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동정표까지 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영업을 하는 이민기 씨(48)는 “일하러 뽑아 놓은 이 지사를 정부가 입맛대로 유권해석해 직무정지를 시켰다. 강원지사와 원주시장이 민주당 사람인만큼 의원도 민주당을 찍어야 원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7·28 재보궐 선거를 8일 앞두고 강원도 원주지역의 후보별 판세를 다룬 기획 보도이다.

이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이인섭 후보와 민주당 소속 박우순 후보, 무소속의 함종한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치열한 3파전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경제는 한나라당의 이 후보와 민주당 박 후보 두 사람만 각각의 경력과 하루 선거운동 일정, 선거공약, 시민반응 위주로 자세하게 다루고 무소속

함 후보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보도가 있기 사흘 전에 실시한 여론 지지도 조사(7월 15일~17일, 강원도민 700명 대상, 강원일보·GTB강원민방 공동 실시) 결과에 따르면 1위가 민주당 박 후보(38·8%), 2위 한나라당 이 후보(21·2%), 3위 무소속 함후보(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후보는 2위 한나라당 이 후보에 불과 4% 뒤지고 있었다.

매일경제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세 후보 중 함 후보만 기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언론사가 선거보도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객관성을 잃은 보도

▲ 2010 - 125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0년 11월 29일자 17면 「“국민목숨 담보 훈련…왜 공포 키우나”/서해 한미 연합훈련 돌입…넷 세상도 초긴장/“대비도 없이 강력응징 운운 한심” 비난 빗발」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은 스타크래프트의 저글링이 아니다.』

28일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연평도는 물론 전국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의 포성 소리가 들려 주민대피령이 내

려졌다 취소됐다.

이날 아침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북한의 대응과 재도발 가능성을 질의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이번 훈련의 여파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연평도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모두 연평도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러는 가운데 적잖은 국민들은 이날부터 4일 동안 서해 격렬비열도 이남에서 펼쳐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전쟁 공포를 확산시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전쟁의 달인”이라는 군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벌어지지 않던 남북 간 교전이 군대도 안 간 대통령 시대에 특하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며 “남북한의 정치적 경직이 이런 사태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흥분한 목소리로 ‘강력 응징’을 쏟아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북한이 미쳤는지 알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미쳤다”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안락한 의자에 편히 앉아 큰소리치는 정치인들이 한심하다”고 쓴소리를 해댔다.

누리꾼은 또 “우리가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 꿈쩍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북한군은 ‘고양이 앞의 쥐’가 아니다”며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달아날 사람들이 전쟁 당사자인 전선의 장병들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기분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들을 생각하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마치 게임을 하듯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긴장이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징후도 나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소식과 북한의 보복 발언이 나온 지난 26일 코스피지수는 연평도 포격 이후 최대 낙폭(25.88포인트·1.34%)을 기록하며 1901.80로 마감했다.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4000억 원 가까이 팔아 치우는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일본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여행 자제령을 발령해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으며, 혼다 등 일본 기업은 한국 출장을 아예 중단시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한국에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 5만 명의 대피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용시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우리나라를 찾은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을 언급하며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1월 28일부터 나흘 동안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 비판적 의견들과 더불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의 골자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마치 게임을 하듯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편집자는 이에 맞춰 큰 제목을 「“국민목숨 담보 훈련… 왜 공포 키우나”」라고 달았다.

한미연합훈련에 즈음해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된 군사력을 보여주는 훈련”이라는 내용의 지지 의견과 “추가적 군사조치는 확전의 불씨가 될 뿐”이라고 비판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펼쳐졌고,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연평도 사태 당시 ‘우리 군이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론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11월 27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가 온·오프라인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지지 의견은 외면한 채 ‘한 누리꾼’의 목소리만을 통해 “남북간 교전이 군대도 안 간 대통령 시대에 특하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북한이 미쳤는줄 알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미쳤다” “전쟁이 터

지면 가장 먼저 달아날 사람들이…” 등 자극적인 표현들을 섞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했다. 취재기자가 출처 및 아이디(ID)를 밝히지 않은 ‘한 누리꾼’의 의견은 모두 3문장으로 길게 기술됐고, 그 외에 다른 누리꾼의 글은 기사에는 없다.

취재기자는 그 대신 ‘국민들’을 주어로 삼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마치 게임을 하듯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부가 한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사의 취지를 정리했다.

위 기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실체가 불분명한 집합명사를 앞세워 전하거나 익명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또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전문 및 ②항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2.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3.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주 문〉

경북매일 2011년 2월 23일자 1면 「이상득의원 정계 은퇴요구는 망발·인신공격/“박지원, 당신이나 물러나라”」 기사의 제목, 경북일보 2월 23일자 1면

「박지원 또 형님 험구」 기사의 제목, 每日新聞 2월 23일자 6면 「박지원, SD <이상득> 물고 ‘노이즈 마케팅’」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매일 경북일보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매일)=『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정 국회의원을 겨냥해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구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행히도 실패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은 아픔을 참고 형님(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정계에서 은퇴시켜주기 바란다”며 “형님 역시, 동생인 대통령과 나라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용퇴하고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중략)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이 전부의장의 지역구인 포항과 울릉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정치공세로 정계은퇴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병석(포항 북)의원은 물론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등은 이날 즉각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나 은퇴하라”고 고함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병석 의원은 본회의 직후 “박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유신독재와 같다고 얘기하는 대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발이자 허무맹랑한 정치공세’라고 항의를 하면서 고함을 쳤다”면서 “유신체제에서 박 대표처럼 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언론자유가 있었나.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유신체제와 비교하나”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전 부의장 은퇴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택한 독립된 헌법기관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 무슨 권한으

로 은퇴하라 말라고 할 수 있나”며 “있을 수 없는 망발을 쏟아놓은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후략)』

(경북일보)=『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2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포항 남·울릉)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또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회의장에서 “발언을 중단 시켜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당신이나 은퇴하라”고 즉각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지와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떻게 이명박 정부를 유신독재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걸 있을 수 없는 망발이고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언하는 것은 넋두리에 불과하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유신체제가 있냐. 유신체제에서 어떻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후략)』

(每日新聞)=『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정계 은퇴를 요구, 한바탕 소란이 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중략)

박 원내대표가 이 전 부의장 공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예산국회 때도 경상북도의 예산을 두고 ‘형님 예산’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고, 대구경북과 울산이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나선 것도 ‘형님 벨트’라고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형님 마케팅’을 구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까지 이 전 부의장을 물고 늘어진 것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중략)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형님만을 겨냥한 1차원적 연설이고, 형님만을 악용한 노이즈 마케팅이었을 뿐”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고 동료 의원들의 출입도 막은 민주당이 반성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남의 탓만 늘어 놓았다”고 비판할 정도였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의 적시 기사들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의 형인 포항 출신 이상득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실과 이에 대한 경북 포항 출신 의원 및 지역 관계자 등의 반응을 다룬 기사들이다.

기사들은 내용 중의 박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어린 반응에 들어 있는 <망발> <인신공격> <험구> <‘노이즈마케팅’> 등의 표현을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큰따옴표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객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들은 편집자 스스로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서 일탈해 보도 대상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편집행태는 사실보도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를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항(사회적 책임)·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항(사실과 의견의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